

특별자치도 입법 과제·해결책 모색

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타 시도와 비교·분석으로 특별법 통과 필요 전략 대응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기초발전을 통해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정부 또는 국회)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비밀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염영선 도의원(정읍)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술발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황영준 전라북도 국회협력관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가치를 증진하고, 새민국의 잠재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거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박성태 전북도 정책보좌관은 “전북이 확대되는 이유는 광주·전남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정부가 특별법을 꺼리는 이



28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국주영은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유는 중앙정부의 지배력 약화와 재정 지원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강무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의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의 ‘분단과 평화’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입법 목적과 구제성을 표현하는 명칭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최장인 신기현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학회,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으

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한 뒤 회화했다. 토론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전북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해경 성범죄 처벌 ‘제식구 감싸기’

불법촬영·성추행 등 범죄에도 5명 중 1명은 ‘경정계’ 민주 윤준병 의원 “해경청 기강 확립 성비위 방지책 필요”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장외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칙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

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 이는 점에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렇듯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해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 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해양경찰청 분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경수기자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약속 이행을”

민주 남인순 지역위, 국회·대통령실 등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박희승 위원장)는 지난 27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대법안) 심사 및 통과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질타하는 동시에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 협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회,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와 남원애환운동본부, 남원시회동사회협의회 등 남원시민 300여명과 국민이힘 이용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한병도·안호영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대의 의료보장을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

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희승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어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치원이 아닌 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위원장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렇듯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해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 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완주군의회, 추경 본예산 대비 1217억 증액

1차 정례회 폐회... 조례안 22건 상정 처리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 27일 제2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각종 조례안 22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연액 총 규모는 1조297억7,709만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예비비는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 등 13건 32억5,13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5억8,190만8,000원을 지출하고, 2억377만15,000원을 이월해 지출잔액이 4억6,549만2,000원이 발생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 시 분기별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출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쌀 시장거래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점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에결특위는 일반회계 세출 심사 결과 20억5,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민관합 거버넌스 위원회 참석수당 △원주군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비 △하비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약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4건에 대해 16억 6,000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이밖에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함께 상정된 22건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처리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서남용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29일부터 고산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와이드 앤 로컬푸드 축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축제의 성공은 안전한 축제이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다음 제27회 임시회는 10월 18일 화요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기자

1년 농사 벼 갈아엎은 정읍지역 농민들

“생산비 치솟는 와중 쌀값은 통계 이후 45년만에 폭락”

“강아지 사료값보다 낮아 정부, 쌀값 보장해야”

정읍농민들이 봉계를 작성한 이래 45년만에 쌀값이 최대로 폭락했다면서 농민 생존을 위한 쌀값보장을 요구하며 수확 전 벼를 갈아엎었다.

28일 오전 정읍시 이평면 ‘반석보’ 들녘에서는 2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읍농민회(회장 황안택)가 주관한 ‘쌀값보장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논 갈아엎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2021년 벼 생산량이 평년 대비 27만 초과 생산했다는 이유로 쌀값 하락이 시작됐음에도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가격을 발동하지 않았고 이에 쌀값이 최대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정부를 향해 성토했다.

또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먹는 사료값보다 낮은 쌀값”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과잉 생산 때문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오히려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28일 정읍시 이평면 반석보 들녘에서 정읍농민회가 주관하는 ‘쌀값보장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논 갈아엎기 집회’가 열렸다.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수확 전 벼를 갈아엎고 논을 갈아엎고 있다.

서 “단언컨대 쌀값 폭락은 정부 때문이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조차 어겨가면서 엉터리 농장 시장가격을 책정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수입쌀 40만톤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4%가 농민이지만 이 4%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

지고 있는데도 유사 이래 단 한번도 농민 스스로가 쌀값을 책정해 본 적이 없다”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16일 전국농민대회 부쟁 등 부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부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곧바로 반석보 아래 들녘으로 내려가 집결했다.

이들은 정부에 쌀값폭락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1년간 농사지는 벼에 불을 놓고 트랙터를 이용해 수확 전 벼를 갈아엎었다.

/뉴시스

쌀 시장 실패, 정부 수급량 추정 잘못서 기인

민주 윤준병 의원 “단순산출방식으로 추산 소비량과 오차 발생 쌀 생산량 통계 정확성 제고 위한 통계행정 개혁도 뒤따라야”

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 시장실패는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개방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개선하여 시장거래 물량을 산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99%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구간 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천톤이므로 이를 쌀 시장거래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 순할필 하여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거래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 생산량(기)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서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더 격리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거래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거래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시장거래 기준이던 초과생산량의 경우, 통계청이 제시한 생산량 수치(중간값)와 표본오차(RSE), 신뢰구간(90%, 95%, 99%)을 활용하면 구간추정이 가능하다”며, “반약 99% 신뢰구간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구간추정으로 계산한 뒤 생산량 신뢰상한에서 소비량 신뢰하한을 빼면 35만3,000톤까지 값이 나온다”고 설명한 뒤, “민약 지난해 가을에, 이런 정도로 시장거래 물량을 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올해 쌀 소비량 통계 역시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출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쌀 시장거래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점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한 392만 2천톤을, 소비량은 신뢰하한 356만 9,343.7톤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99% 신뢰구간 추계에서, 생산량의 신뢰상한 392만 2천톤과 소비량의 신뢰하한 356만 9,343.7톤의 차이를 뺐더니 35만 2,656톤이 나왔다. 올해 3차에 걸쳐 시행된 시장거래 물량 37만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가을에, 이런 정도로 시장거래 물량을 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올해 쌀 소비량 통계 역시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출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쌀 시장거래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점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